

# 여행업계 고통 언제까지...하늘길 조속히 열어야



## <4·끝> 정부 재개항 의지 보여라

# 광주시 남구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정영미(여·55)씨는 무안공항 폐쇄 이후 여행 상품 출발지를 인천·부산으로 일일이 바꿔 구성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다. 고객 1인당 비용도 15만~20만 원 추가되고 왕복 5시간 이상 이동 부담이 늘었다. 당연히 여행 심리가 크게 위축돼 고객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 광주 지역 여행사 580곳 중 정부의 여행사배 상책임보험 가입 지원(29곳·5%) 혜택을 받거나 관광객 유치 보상금(23곳·3.9%)을 지원받는 가 하면, 소상공인 특례보증(23곳·총 9억원) 등의 도움을 받은 업체는 손에 꼽는다. 이 때문에 “지역 여행업계는 예약 취소와 연기가 이어지며 사실상 전멸 상태인데, 정부 지원은 현장의 절박함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말이 나온다.

무안국제공항 폐쇄는 공항 ‘운영 중단’ 수준을 넘어 지역 관광 생태계 붕괴로 이어졌다. 특히 광주·전남 여행업계가 사실상 전멸 상태에 놓였음에도, 정부가 뚜렷한 지원대책이나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관광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인천·김포·김해 공항 등 이용객이 많은 공항이 라면 이렇게 방치했겠느냐”는 울분 섞인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행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지역 업

출발지 인천·부산으로 일일이 바꿔 지역 업계 “이제 더 이상 못 버텨” “인천·김해라면 방치했겠냐” 울분 로컬라이저 미복구 큰 걸림돌 정부 열린 자세로 유가족과 소통 일시 지원금보다 바우처 지급을

계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정부가 무안공항 재개항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표명하고 유가족과의 신뢰 구축,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 등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발맞춰 유가족도 지역 관광업계 종사자들 고통을 돌아보고 상생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정은성 호남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3일 “무안공항 폐쇄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지역 업체들을 위한 근본 대책은 무안공항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되는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업체들의 상황을 감안해 현장 상황을 이해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여행사를 대상으로한 일시적 지원금보다는 광주·전남 지역민이 로컬 여행을 통해 여행상품을 구매할 경우,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등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역 여행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김남조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 역시 “전세기를 정기노선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중앙정부가 국제관광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항공 전문가들은 정부의 관망적인 태도로 인해 재개항이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원경 초당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정부는 무안공항 재개항과 관련해 단순히 상황을 지켜보기만



1년 가까이 이어진 무안국제공항 폐쇄는 공항 ‘운영 중단’ 수준을 넘어 지역 관광 생태계 붕괴로 이어졌다. 3일 오후 텅 빈 무안국제공항 1층 대합실.

하는 관망적 태도를 버리고 사고 조사 결과와 안전 대책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현재 무안공항 재개항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고 당시 파손된 로컬라이저(항공기 착륙 유도장치)의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미 조사와 비파괴 검사까지 모두 끝난 상태인

데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면 오히려 추가 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로컬라이저도 정상 작동하고, 야간 비행도 하고, 민항기도 들어와야 경제도 활성화 될 텐데 이것 때문에 모든 절차가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정 교수는 분석했다. 정 교수는 “특히 대통령이나 국토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확한 사고 조사와

안전 확보를 약속하고 로컬라이저 철거 및 복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보현 극동대 항공안전관리학과 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권 교수는 공항 재개항시 조류가 많이 이동하는 시간대(오전 8시에서 10시,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를 피해 비행 일정을 조정하는 등 조류 충돌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일례로 조류들이 활동하는 시간대를 피해서 비행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다”며 “첨단 장비 도입과 함께 조류 생태계와의 공존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공항에서 상주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설득하는 것도 정부의 숙제로 남았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은 정부가 제대로 진상 규명이 나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신뢰감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새때, 가장 탓으로 사안을 축소하고 로컬라이저, 항공기 등은 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이미 정부 조사에 신뢰감을 잃었고 유족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사발도 하고 농성도 한다는 것이다. 50대 유가족 A씨는 “유족들은 공항이 사고 현장이기 때문에 지금껏 있다. 사고조사가 제대로 빨리 끝나서 마무리만 된다면 그곳에 있으라고 해도 안 있을 것이다”며 “공항 일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꼭 유가족이 못하게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나. 제대로 진상 규명이 돼야 그나마 유족들도 믿고 슬픔을 닦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서 유가족이 신뢰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사고 조사부터 하고, 또 텐트에 있을 분들을 다른 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 글·사진=서민경 기자 minky@/무안=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 항공운항학과 학생들, 비행 교육 받으러 청주까지 고행길

### 초당대생 하루 최대 3명 훈련 일부 학생 ‘졸업 유예’ 고민도

무안국제공항 폐쇄가 1년째 이어지면서 지역 항공운항학과 학생들이 비행 교육을 받으러 청주공항까지 가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항공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초당대 항공운항학과 4학년생 40여 명은 무안공항의 장기 폐쇄로 야간 비행을 진행할 수 없어 연 4회씩 청주공항까지 가 교육을 받고 있다. 학생들은 졸업을 위해 200시간 이상의 비행(야간비행 7시간 포함) 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횟수로는 한 학생 당 4회씩 이수해야 한다. 과거에는 무안공항에서 모든 비행교육을 받

을 수 있었지만, 무안공항 폐쇄 이후 학생들은 편도 250km 거리의 청주공항까지 가야 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당대 측은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무안공항이 재개항될 것이라 여기고 훈련 일정을 마뤘다가, 학생들이 1년 가까이 야간 훈련을 하지 못한 채 졸업 시기를 맞게 되자 지난 10월 뒤늦게 청주공항 내 시설 비행기관과 계약을 맺어 훈련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여수, 울진 등 다른 공항과도 계약을 시도했으나, 일몰 무렵부터 밤 11시까지 진행되는 야간 훈련이 가능하고 계약에 응한 곳이 청주공항 뿐이었다는 것이 학교 측 설명이다. 나머지 공항은 관제사 없음, 스팟 부족, 장거리·속박 여건 열악, 군부대 비행조 등의 이유로 모두 계약이 불발됐다. 학생들은 결국 청주까지 왕복 6시간을 소요해

가며 훈련을 받으러 가고 있다. 차량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가 차량·유류비·통행료·교관 출장비를 직접 부담하고 있다. 더구나 청주공항의 시설업체 보유 항공기는 3대뿐이라 하루 최대 3명만 훈련할 수 있고, 한서대 등 타 대학 학생들까지 몰려들고 있어 스케줄을 짜는 것조차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기 고장, 기상 악화, 관제 혼잡 등으로 갑작스런 일정 취소도 빈번해 학생들은 사실상 ‘단일 통보’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졸업 유예까지 고민하는 상황에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원경 초당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야간비행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며 “무안공항이 정상 운영됐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고 토로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사조위 공청회 연기에...유가족 밤샘 농성 중단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공청회 연기 결정에 따라 밤샘 농성을 중단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2일 사조위의 공청회 연기 결정에 따라 밤샘 농성을 종료한다고 3일 밝혔다. 유가족들은 사조위가 오는 4~5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공청회에 대해 “불투명하고 졸속적”이라고 비판하며 지난 1일부터 대통령실 앞에서 밤샘 농성을 이어왔다. 유가족들은 사조위가 국토교통부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사실상 ‘셀프 조사’를 하고 있는 점 등 절차·내

용적 하자를 안고 있다고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신설할 것을 요구해 왔다. 유가족들은 이번 공청회 연기를 계기로 향후 사조위를 국토부로부터 독립시키고 전문적인 조사 기구를 새로 출범할 것을 촉구했다. 또 방치된 사고기 잔해와 증거물에 대한 정밀 검증을 토대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할 것, 항공·철도 사고조사 관련 법률을 신속히 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참사의 매듭을 푸는 작업은 이제 시작”이라며 “독립된 조사기구가 세워지고 투명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창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